

제주 모슬포 지역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

조성윤* · 문형만**

목	차
1. 머리말	2) 도민대책위의 결성과 자원확대
2. 관광개발과 군사기지 계획	3) 연합운동의 모색과 자원약화
1) 관광개발 계획	4.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성격
2) 군사기지 건설계획	1) 운동의 이념
3.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전개과정	2) 운동의 조직과 자원동원
1) 주민대책위의 결성과 자원형성	5. 맺음말

1. 머리말

1987년 이후 제주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사회운동이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형태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 군사기지 건설 반대운동(이하 군사기지 반대운동)은 1988년 제주 모슬포의 송악산 주변지역에 군비행장을 건설하려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도민, 대학생, 재경도민 등이 함께 1여 년 동안 싸웠던 대표적 지역 주민 운동이다.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 운동을 제주사회에서 보기 드물게 성공한 운동으로 평가한다.

제주의 지역 주민 운동의 대부분은 지역개발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과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특별연구원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주민운동의 경험은 이후 제주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그 중에서 중요한 특징은 첫째,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인식변화 둘째, 운동주체가 주민에 머물지 않고 대학생, 도민, 시민단체까지 연대 혹은 주체로 나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 동안 제주의 주민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부만근, 1997)와 개별사례를 분석한 연구(조성운, 1995; 조성운, 1998; 부만근, 1995; 조성운·문형만, 1998)가 나와있다. 하지만 그 밖의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군사기지 반대운동이 끝난지도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학술적인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목적은 군사기지 반대운동을 제주 사회운동의 한 사실(史實)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과 더불어 제주 지역 주민운동의 내부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전개 과정과 운동조직이 내세운 이념, 이해당사자인 현지 주민들의 조직과 이를 지지하고 좀더 보편적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려 한 사회운동단체들의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고, 자원을 동원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당시에 발표되거나 작성된 성명서, 결의문, 신문기사, 소식지와 같은 공식적인 자료의 비판적 독해에 근거한 문헌중심의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이는 운동조직의 1차 자료에서 나타난 이들의 주장을 끝이끝대로 이 운동의 이념으로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2. 관광개발과 군사기지 계획

1) 관광개발 계획

1960년대까지 제주도는 곡물위주의 농업생산과 수산업, 축산업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의존한 정체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제주도는 국가주도의 관광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갔다. 당시 국가는 산업화와 자본축적에 필요한 외국자본을 조달할 지역이 필요했고, 제주도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되는 지역이었다. 국가는 제주도에 도로·항만·통신 시설과 같은 각종 관광기반 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한편, 중문관광단지와 신제주로 대표되는 거점개발 방식을 채택하였

다. 관광에 치중한 국가의 제주도 개발정책은 도외 대규모 자본가들에게 각종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짓기 위한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관광개발을 통해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고 도민들의 생활수준은 점차 나아졌다. 특히 개발붐을 타고 토지 투기가 진행되자, 그 가운데 일부도민은 땅을 팔아 부동산을 사고 자가용을 굴리면서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계층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사회는 개발의 긍정적 효과 못지 않게 관광관련산업 중심의 기형적 산업구조, 개발과정 및 개발이익으로부터 지역주민 배제, 환경오염 및 생활환경의 파괴 등 부작용을 낳게 된다. 그 결과 사회구성원의 절대적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지만 계층간, 지역 간, 산업 간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상태로 잠재화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외자조달과 같은 애초에 의도한 관광개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행한다.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관광만이 살 길'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섬 전체로 관광개발을 확대할 의도를 분명히 하고, 건설부는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1985년~1991년),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¹⁾

모슬포 송악산 지역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비로소 관광지구로 지정되었다. 이 계획은 제주도 전역을 3개 단지 14개 지구로 나누어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송악산지구'가 포함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모슬포는 송악산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이었지만, 관광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정체된 지역이었다. 그 대신 모슬포는 지정학적 입지조건으로 군사적 요충지로서 주목받았고, 실제로 군사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었다. 때문에 관광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다른 지역의 땅 값이 크게 상승하고, 땅을 팔아 이익을 얻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꼈다.

그러나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은 지역의 관광개발을 통해 관광수입은 물론, 땅 값 상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또한 남제주군에 의해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은 주민들의 이런 기대감을 더욱 부풀렸다. 그 후 송악산 관광지구에 대한 개발이 실제로 진전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송악산 주변지역에 대한 외부인의 토지 매입이 증가하고, 땅 값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게다가 1987년 노태우 대통령후보는 서귀포지역 선거 연설회에서 일제가

1) 각종 관광개발계획은 제주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아직까지 관광개발계획 자체를 분석한 글은 없다. 다만 관광개발계획을 부분적이거나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는 많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 글을 참조할 것(이상철, 1998 ; 조성윤, 1995).

강제로 주민들로부터 빼앗아 비행장을 만들었던 토지 중 당시까지 국가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당 부분의 토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제주신문, 1987년 11월 26일자). 그런데 반년도 지나지 않아 주민들은 정부가 약속했던 군용비행장의 옛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2) 군사기지 건설계획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외부인들-중앙정부, 제국주의-의 눈에는 하나의 독립된 사회이기보다 소외된 변방사회 혹은 주변사회로 비취졌다. 특히 해방이후 정체된 농업사회에서 국내의 최대 관광지로서 부각된 제주도는 여전히 국가에 의해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해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한반도, 중국대륙,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원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에 불과하였고, 그후 조선시대부터 제주의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병영지가 건설되었고, 더욱이 섬 전체가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목받고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 때부터이다.

일제는 중국대륙을 침공할 목적으로 제주도 모슬포에 최초로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 모슬포 지역은 대한민국의 최남단 지역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태평양 연안에 연접해 있고, 주변에 송악산, 단산, 산방산이 위치하면서 넓은 평지와 인접한 곳에 천연항인 화순항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우선 1935년 모슬포 지역에 모슬봉에 무선 전파탐지시설, 알드르 평지에 비행장, 격납고, 방공호, 탄약고 등을 건설하여 군사기지로 활용하였다. 비행장이 들어선 알드르 일대는 해안에 인접해 있어 바람이 심하게 불지만 평야로 불릴 정도로 넓은 평지로서 대정 주민들의 농토였다. 그런데 일제는 주민들로부터 강제로 토지를 몰수하고 주민 및 징용자들을 동원해 이 지역을 군사기지로 만들어 미군 공습에 대비했지만, 일본은 결국 패망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몰수된 토지가 원래 토지주들에게 돌려지지 않고 해방 후에도 군사기지로 이용되었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모슬포 지역에는 육군 제1훈련소와 포로수용소가 들어서고, 알드르 비행장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

된 채 한국군 해병부대와 미공군 레이더기지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모슬포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고, 군사전략 차원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면적인 대규모 군사기지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개연성은 미국의 전략적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화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방부에 의해 1987년 12월에 수립·결정된 모슬포 지역에 군비행장을 비롯한 군사기지를 건설하려고 한 계획이었다.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정권 시절 신냉전체제에 따라 군전력을 강화시켰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한 미국의 “국방전략은 미국의 영토를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방위하고, 소련을 봉쇄하며, 우리(미국: 필자 주)의 전략적 우방들을 보호하는 데 집중된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택한 군사전략은 주로 시간과 거리문제 때문에 우리 군사력을 특히 일본·한국·필리핀의 영구적인 기지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삼성, 1993: 302)이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필리핀지역에 미군주둔과 관련된 협상실패로 새로운 미군기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한국과 일본은 그 대체지로서 고려되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적이 엄연히 존재한 냉전지역이고,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이 주둔하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는 국가였다.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은 장기집권 할 계획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무척 중요한 시기였다.

미국 전(前) 태평양지구사령관 로널드 헤이즈는 한 세미나 토론과정에서 필리핀 미군기지를 이전 혹은 대체할 영토를 제공하려는 아시아 국가가 엄연히 있음을 밝히고 있다.²⁾ 특히 미국에게 한국은 필리핀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 내부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반민족주의적 저항에 직면하여 미군기지의 장래가 불투명한 것과 달리,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민족주의적 정치세력이 소수에 머물러 있는 동맹국으로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국가였다(이삼성, 1993: 329).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한국 정부는 제주도 모슬포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각각의 특정 지역을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다.

국방부의 보호구역설정이 통보되자 건설부, 제주도, 남제주군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응을 취할 수 없었다. 특히 남제주군은 지역주민들

2) “아시아의 지도자로부터 그러한(필리핀 미군기지: 필자 주) 대체지가 존재한다는 비공식적인 언질을 받을 때마다 항상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에 유포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 알려주고 싶습니다. 필리핀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동아일보사, 1990: 256-257).

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단지 주민들의 생계터전의 상실과 같은 문제로 인해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주민설명회, 이주대책 등을 마련해줄 것을 내부문건을 만들어 국방부에 보고하였다.³⁾

이에 대해 공군은 남제주군 부군수를 공군본부로 불러 경계표시 필지목록을 통보하고 주민들에게 군사시설이 지역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할 뿐 아니라 보호구역내 농경지를 최대한 경작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하였다(1988.6. 16).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안 것은 건설부가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에서 모슬포의 송악산 관광지구를 공식적으로 해제하기 바로 전날 신문보도를 통해서이다(1988. 8. 12). 이를 접한 지역 주민들, 특히 당시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국유지를 빌려 농사를 짓던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새로이 토지를 빼앗기고 고향을 등질 수도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준비행장을 197만평이라는 넓은 땅 위에 설치하려는 국방부의 정책에 반발하였고, 또한 국방부의 계획은 관광개발 계획을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결국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대학생, 재야·사회 단체들은 모슬포 지역에 대한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⁴⁾을 확대

3)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1988. 5. 30)

문 제 점	건의 사항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통보된 도면상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 일부 취락지역이 저촉되어 사권제한등으로 민원이 발생이 우려됨	구역면적으로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농지이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취락지역은 동지역내에서 제외토록 요망
시설보호 구역내 면적 약 3,305천㎡(100만평) 중 우량농지가 80%가 되어 농업을 주소득으로 하는 주민의 생활터전이 없어지게 됨으로 시설확장시 주민집단민원이 발생이 예상됨	관계부서(국방부)에서 사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회 개최 등 대주민제도에 최선을 다하고 생계대책 수립과 동지역에 국가방위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강구가 요망됨
송악산 일대의 상모리 공동목장과 인근연안은 자원이 풍부한 공동어장이 있어 상·하모리 주민이 생활터전으로서 폐쇄 또는 통제시 생계가 막연한 실정임	공동목장 폐쇄에 따른 대체목장 조성 및 공동어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어장 이용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안도로 개설이 요망됨
상모리 산이수동 진입로 폐쇄가 불가피할 때 생활권이 인근 마을과 멀어지게 되어 반발이 예상됨	상모-사계간(군도 17호선) 도로에서 해안변으로 도로 확장포장이 요망되며 또한 주민요구시 주민이주 대책수립 시행이 요망됨
모슬봉에 있는 군사시설을 이설하는 방안 검토	모슬봉에 있는 군사시설을 토지이용 제고를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송악산으로 이설하여 집중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본구역 인근부락 소음공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	소음공해 기준치 측정후 지장이 있을 시 이주대책 수립
구역내 시설된 공공시설(분뇨처리장, 해너탈의장) 이용 불편	분뇨처리장, 해너탈의장은 군사시설에 지장없는 한 존치하고 해안변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안도로 개설 조치 요망

출처 : 남제주군,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에 관한 사항」, 1988. 11

4)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69만 9천평 중 국유지는 95필지의 61만 9천평, 군유지는 5필지의 5천평, 사유지는 109 필지의 75천평이었다. 한편 새로 추가로 설정된

하여 지정한 것에 대해 운동을 조직화하며 저항의 깃발을 치켜세웠다.

3. 운동의 전개과정

1) 주민대책위의 결성과 자원형성

모슬포 지역에 관광지 대신 군사기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을 때, 모슬포 지역은 그 내용과 관련한 갖가지 소문과 함께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모슬포 지역에서도 지역에 관심을 지닌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정사회연구회라는 소모임이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이들은 그 기사에 대해 우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관심사였다.

마을 청년들은 가장 먼저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 결사반대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8월 21일)를 구성하고, 대정읍, 남군 등 행정당국을 통해 계획의 진위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정준비위는 이런 과정을 통해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이 공군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임을 알게 된다. 이들은 이 계획을 주민들의 농토와 어장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밀려 떠날 수도 있는 중대한 지역의 생존 문제로 받아들여, 주민들에게 시급히 알려 나갔다. 또한 마을 리장 및 마을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설득해간다. 이런 대정준비위의 노력은 모슬포에서 처음으로 '산이수동 대책위원회'의 형성(9월 16일)으로 첫 결실을 맺게된다.

모슬포 지역 밖에서도 모슬포의 '군사기지계획'은 대학사회와 재야·사회 단체에게 중요한 지역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제주 사회에서는 19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 생겨난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제주여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등 재야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주시의 탐동 불법매립을 중단시키기 위한 지역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당시 탐동불법매립반대운동에 참여한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가 중심이 되어 '군비행장 설치계획'에 대한 정확한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곧바로 제주대학교대정학우회,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125만평 중 국유지는 11필지 8천평, 군유지 12필지의 9만평, 사유지 1,732필지 115만2천평이었다(남제주군, 1988. 11). 따라서 모슬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총면적은 195만평이다.

공동으로 기자회견과 함께 「제주도송악산국가군사주요시설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청와대, 국방부, 미대사관, 한미연합사령부 등 관계 행정당국에 보내어 9월 10일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표면화되었다(1988. 8. 26).⁵⁾

또한 모슬포 지역출신의 학생들은 대정준비위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제주대학교 대정학우회는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는 글」(1988. 9. 10), 사계학우회는 「사랑하는 길 삼촌님께」(1988. 9. 18)을 통해 자녀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에 의한 '군사시설'의 건설계획이 확정적이라는 것과 계획시행에 따른 예상피해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렸다. 이들이 군사기지 반대이유로 내세운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첫째, 고향상실, 둘째, 삶의 터전으로 농토와 어장상실, 셋째, AIDS와 미군범죄 등 사회문화적 피해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들은 지역의 모든 부모님들이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민들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한다. 이어서 이들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와 지역조사위원회에 소속된 학생들과 함께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도지사와 개발국장을 만나 군사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확인한다.⁶⁾

이후 제주대학교 대정학우회,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는 자신들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관계당국이 아무런 대응도 없자, 이들은 '국가주요군사시설 계획'을 '미공군 기지화'의 첫 단계로 받아들이고 '핵병기시설의 공군기지 건설계획'을 막

5) 이들의 질의요지는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배경, 둘째, 필리핀의 미군기지 대체 가능성과 미국과의 협의사항, 셋째, 대통령 선거 당시 노태우의 임대불하 약속은 공약인가 空約인가, 넷째, 이른바 X.Y.Z 군사전략의 실체에 대한 공개이다.

6) 1988년 9월 13일 제주도청에서 도지사, 개발국장, 총학생회장, 지조위원 1명, 정우회원 3명이 참석하였는데, 학생들의 질문에 행정당국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① 군사기지의 용도는 무엇인가? 한국 공군기지와 민간여객기용일 뿐, 미공군기지는 아니다
- ② 관광백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와이는 군사시설이 관광시설보다 이익이 더 많다. 공군기지설치도 경제적이고 유익하고, 국방상 필요하므로 관광개발이 백지화되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다
- ③ 군사시설이 들어서면 관광개발계획에 장애가 되지 않는가? 관광객의 증가로 제주공항이 포화, 송악산의 공군 및 민항 공항 건설은 관광개발 계획에 고무적이다.
- ④ 피해 예상지역은 어느 정도인가? 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107만평 전체에 군사시설이 들어선다면, 녹지시설 등 약 500여만평이 역시 보호구역으로 설정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 ⑤ 읍장이 보여준 군비행장 조감도는 무엇인가? 아는바 없다. 자세한 것은 9월 하순 공청회에서 밝혀질 것이다
- ⑥ 군사기지의 건설배경은? 일제 때처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인 것 같다(도지사와 면담내용 메모, 1988. 9. 13).

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1988. 9. 19). 대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학년별, 학과별로 군사기지설치 배경과 피해상황 등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둔 활동을 전개한다.

1988년 9월 20일, 마을 청년과 지역출신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모슬포군비행장설치결사반대대책위원회준비위원회는 「우리는 결코 대정을 떠날 수 없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정읍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를 통해 자신들의 운동의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함께 집회를 준비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당시 국유지 이용신청서 접수과정에서 나타난 군부대의 요구조건을 볼 때,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군비행장 설치계획은 사실이고, 이에 따른 피해 정도와 지역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따라서 “지역개발이 백지화됨으로 군기지가 들어온다고 했듯이, 군비행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막으면 지역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이들은 군비행장 건설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뜻을 집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집회시기와 홍보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여유있는' 시기이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추석 다음날인 1988년 9월 26일로 결정하여 유인물, 방송 등의 방식과 마을별로 준비위원들이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마침내 모슬포군비행장설치결사반대 결의대회는 추석 다음날인 9월 26일 대정 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과 대학생, 재야·사회 단체 등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준비위원회는 「모슬포군비행장설치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실시하며」에서, 자신들의 집합행동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분명히 한다. 그들은 첫째, 휴전협정의 불가침조약으로 전환을 촉구하며 통일운동 차원에서 둘째, 대통령의 공약이행과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셋째, 일체의 선심, 흑색선전, 협박, 폭력을 배격한 민주국민으로서 넷째, 반대정, 반민족 세력 및 불법적 정치게임을 규탄하기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한다(준비위원회, 「결의문」, 1988.9. 26). 이와 더불어 준비위원회는 지역주민들에게 집합행동 과정에서 필요한 행동방식을 '애향주민 행동요령'⁷⁾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운동 방향과 목표로서 '지역대책위 설정하고 공동대책위 결성하자', '우리는 죽어도 대정을 떠날 수 없다', '모슬포 군비행장설치를 결사반대 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이행하라', '지역주민 주체되는 송악산 개발 이룩하자'는 것을 주장

7) 그 구체적인 행동수칙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주민은 첫째, 9월 26일 오전 11시 대정국민학교로 모입니다. 둘째, 농민은 농민복장, 어민은 어민복장으로 참가합니다. 셋째, 결의대회 사실을 널리 알리고 가족과 이웃을 동반합니다”(결의대회선전문, 1988. 9. 26).

하였다.

또한 재야단체들은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투쟁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히고,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송악산 공군기지 계획이 지닌 반평화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들은 '제주도민 단결하여 공군기지 저지하자', '민족생존 위협하는 공군기지 결사반대', '실항민이 될 수 없다 기지설치 철회하라', '아름다운 제주도에 핵기지가 웬말이나 기지설치 저지하자'고 외쳤다.⁸⁾ 제주도내 3개 대학의 총학생회도 모슬포 군사기지 설치 계획이 모슬포 지역주민의 문제만이 아닌 학생, 도민들의 문제로서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뜻을 같이하여 '모슬포 군사기지 설치 결사저지'를 위한 투쟁을 함께 해 나갈 것을 밝힌다. 학생들은 특히 모슬포 군사기지화는 단순한 공군기지가 아니고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기지의 건설임을 강조한다.⁹⁾

이렇게 대정청년들이 중심이 된 준비위의 결의대회에서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와 집합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의 지원 및 연대과정에서 확인하고, 행사장을 나와 가두 평화행진을 통해 읍사무소 앞에 진출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계획의 조감도 공개와 공식적인 입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읍사무소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의 보호 속에 마지못해 계획의 조감도를 공개하고, 입장은 지역주민들의 뜻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읍장의 약속을 받아들여 초등학교로 돌아온 후 오후 5시경 자진해산 함으로써 결의대회를 마쳤다.

1차 집회를 마친 준비위는 상모 2리 사무소에서 상모·하모리 대책위원 72명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8시 30분부터 자정에 이를 정도로 자유롭게 열띤 토론을 한 후,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결사반대 대정읍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대정대책위)를 결성하였고, 그에 따른 정관협의, 공동대표 및 위원장 선정, 사무국인준 등 조직체계를 갖췄다(10월 1일). 공식적으로 대정읍 차원에 조직을 갖춘 대정대책위는 자신들의 운동 목표-군비행장 건설계획 무효화-를 쟁취하기 위해 운동일지, 운동방법, 다른 지역의 운동사례(충남 해미), 예상피해, 한미행정협정내용 등 운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담은 소식지 「알뜨르」¹⁰⁾를 발행하여 체계적으로 알려나가는 활동을 전개해갔다.

8) 참여한 단체는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제주주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서귀와이 엠씨에이청년연맹,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제주연합회이고,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송악산공군기지설치 결사반대투쟁에 들어가며」(1988. 9. 26)이다.

9)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제주교육대학 총학생회, 제주전문대학 총학생회, 「성명서」, 1988. 9. 26)

10)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결사반대 대정읍 공동대책위원회가 발행한 소식지 「알뜨르」는 결의대회 직후인 10월 5일에 제1호가 나왔고, 제2호는 총결기대회를 개최하기 하루전인 10월 15일, 제3호는 11월 4일 발행되었다.

대정대책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운동목적이 군비행장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가 아니라, 계획 자체의 철회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그러므로 충남 서산 해미의 사례에서처럼, 행정당국의 설명회가 주민의 뜻을 무마시키고 군사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대정대책위는 강력하게 거부한다.¹¹⁾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를 결사반대 한다', '우리는 죽어도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노태우 대통령은 선거공약 이행하라', '피해보상 필요 없다 군비행장 결사반대', '지역주민 주체되는 송악산 개발 이룩하자'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속적인 홍보작업을 전개해나간다.

제주시에서는 탐동 불법매립 반대운동을 전개하던 지역운동이 '군비행장' 문제를 제주도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갔다. 이들은 우선 송악산 공군기지 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노태우대통령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와 「성명서」 등을 발표한다(1988. 10. 5). 이들은 군비행장 문제가 첫째, 국내의 문제만이 아닌 미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고, 둘째, 단순한 군비행장이 아니라 '핵기지'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가 중심이 된 재야단체는 송악산 군사기지를 단지 주민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인다.¹²⁾ 곧 바로 이들은 제주지역 사회단체 실무자회의를 열어 (가칭) '송악산 공군기지 설치 결사반대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논의하고(10월 8일), 계속하여 반대여론을 불러 일으키는 활동에 애쓴다.

서울에서도 제주지역의 군사기지만대운동의 소식을 접한 제주출신 대학생 및 일반인들이 고향(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대학생들은 서울지역 21개 대학교 학우회 '제주도 학우회 협의체'(10월 5일)를 결성하고, 이들과 일반인 17명이 한국기독교 인권위사무실에서 모여 '제주도 모슬포 군사기지 반대 현황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10월 6일). 준비위모임을 성격을 띤 이 자리에서도 제주지역에서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과 관련된 의문사항들과 예상되는 피해와 제주개발의 군사적 측면이 새롭게 제기된다.¹³⁾ 10월 14일 재경인들은 '제주도 모슬포 군사기지 설

11) 이들은 "설명회에 참석하려는 어떠한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처럼 대정과 제주도 전체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자손 대대로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다"("알뜨르"제1호, 1988. 10. 5)

12) 이들의 인식은 주민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발표된 연대성명서에 잘 나타나있다(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제주여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서귀와이엠씨에이청년연맹,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제주연합회, 「송악산공군기지설치 결사반대투쟁에 들어가며」, 1988.9. 26).

13) 이들은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어가고 있는 근거로서, ① 중산간도로 중심으로 방사

치 결사반대 서울 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과 결의대회'(이하 서울대책위)를 갖고, 이 자리에서 「제주도 모슬포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대한공개질의서」를 발표한다.¹⁴⁾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맞부닥뜨린 국방부, 공군, 남제주군 등 행정당국은 한편으로 예비군 중대장 혹은 지역유지들을 모아 놓고 군비행장 건설에 반대하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 날 수도 있음을 은근히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설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흘려보낸다.¹⁵⁾ 하지만 주민들이 각종 성명서와 결의대회를 통해 설명회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자, 공군본부는 현지사정을 파악하고 설명회의 개최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담당자를 직접 제주도에 파견하여 알아본다. 또한 남제주군은 지역주민들이 설명회 개최를 적극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공군본부에 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¹⁶⁾

10월 11일 대정대책위는 긴급총회를 열어, 관계당국이 열리는 설명회를 거부하며 군사기지가 철회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을 촉구하는 '군비행장설치 결사반대 총궐기대회'를 10월 16일에 열 것을 결정하고, 이를 알리는 포스터, 전단, 성명서, 머리띠, 현수막, 피켓 등을 만들어 마을 곳곳에 붙이고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대회준비를 하였다.

대정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궐기대회는 상·하모리 주민이 중심이 된 지역주민과 함께 대학생, 재야단체 대표들이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3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공약 이행, 기지설치계획 철회, 관계당국의 기만적 책동 중단, 진상공개' 등을 주장하며 "타협없는 투쟁으로 군사기지 결사 반대"에 나설 것을 한 목소리로 주장한다.¹⁷⁾ 이 집회에서 대정대책위와 별도로, 대정읍의 각 마을리장들도 "지역의 대표자로

선형도로의 건설 ② 한라산에 80년대초부터 2개 대대급 부대 주둔설 ③ 남한산성 군형무소 설치 소문 ④ 군사적 필요의 중대로 제주해역사령부가 육군소속 제주지역사령부로 전환설 ⑤ 자유항 개발 후보지인 화순항이 모슬포 군비행장과 관련하여 해군의 군항화 우려 ⑥ 교래리 제동목장에 비행훈련원 설치계획 등을 지적한다.

14) 질의사항에 대해 11월 1일까지 자신들에게 직접 답변서를 보내줄 것과 중앙일간지에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을 덧붙인다.

15) 군사시설보호구역 설명회 개최 계획협회의에 따르면, 남제주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공군본부(8월 31일)와 국방부(9월 1일)에서 각각 한 차례씩 열렸다. 협의내용은 보안사와 협의를 거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군본부가 주관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남제주군, 1988. 11).

16) 남제주군, 1988. 10. 13.

17)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 결사반대 대정읍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1988.10.16.

서 지역주민이 당할 고통을 좌시할 수 없어” 군사기지 반대운동에 나섰으며, 자신들은 “전쟁없는 실항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군사기지설치를 거부”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선거공약을 이행하여 그 동안 희생을 보상할 것”을 강력히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집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국방부가 열고자 하는 설명회는 군사기지의 설치를 전제로 한 것이 때문에, 설명회에는 절대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대정대책위는 집회에 참석한 이들의 반대열기를 홀트리지 않고 모슬봉에 있는 미공군 부대 앞까지 이어갔으며, 참석자들은 부대앞에서 자신들의 뜻을 한 목소리에 담아 외쳤다. 이어 풍물패의 장단에 맞춰 흥을 돋군 주민들의 행렬은 개사곡을 힘차게 부르며 모슬포 중심가에 모여 군사기지 반대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자신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 등 운동의 정당성과 운동에 동참할 것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것으로 이 날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이 날 저녁 모슬포 천주교회에서도 ‘군비행장설치반대를 위한 특별미사’가 열려 반대운동의 열기는 마을 내 각종 단체까지 확산되었다.

한편 때마침 국정감사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대정대책위는 당시 국정감사 국방위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중문 휴양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주민들이 경제적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지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10월 20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문공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에서 군사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 공약사항, 군사기지의 건설 시기와 규모 등의 질문들을 제주도 당국에 쏟아 부었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군사기지 건설문제가 도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달리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를 불하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그러나 국정감사과정에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제주도 남제주군 모슬포 지역은 날로 증가되는 적공군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남해지역의 항공작전 신장, 해상 교통로 확보, 유사시 증원군의 전력수송 및 전력예비기지·군수물자 제보급 등 다목적기지로 활용키위해 군의 중·장기 전력증가 계획에 의거한 군비행기지를 확장, 작전기지로 발전시키고자”, 모슬포 송악산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했음이 공식적으로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¹⁸⁾

한편 지역주민의 거센 저항은 국정감사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으로부터

18) 국방부, 「국회자료」, 1988.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강보성)과 고향이 대정 출신인 신민주공화당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김두윤)은 대정대책위를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밝혔다. 또한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군부대가 활용하지 않는 토지를 주민에게 불하할 것을 약속한 대통령 공약사항과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들어 국방부와 공군본부에 송악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을 고려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¹⁹⁾ 또한 제주도관광협회도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모슬포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른 한편 제주도는 군비행장 건설계획에 대한 군사기지 운동을 “지역주민, 재야, 대학생 연대하여 결사반대 대책위 구성, 반대서명운동 전개”, “공군본부 설명회 불참결의와 공청회 개최요구”, “필리핀 공군기지 이설 등 주민선동으로 반대여론 확산”으로 지역동향을 보고하고, 또한 이 문제가 국정감사 때 중점 거론되었음을 덧붙이면서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줄 것을 요청한다.²⁰⁾ 이에 대해 “관계부처는 지역주민의 반발과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유세 당시 군사시설 보호지역을 지역주민들에게 불하하겠다고 공약한 점을 감안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도지사를 통해 언론에 알려진다.²¹⁾

궐기대회 후 대정대책위는 군비행장 관련하여 더 밝혀진 사항과 운동의 전개과정을 유인물과 벽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계속하여 알려나갔고, 대책위 사무실을 하모리 사무소에 마련하여 운동의 체계성을 더욱 더 확보해갔다. 이와 더불어 제주시에서도 재야단체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조직을 준비하였다.

2) 도민대책위의 결성과 자원확대

도민준비위는 그 동안 모슬포 지역주민들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군사기지의 성격을 알려나가는 활동, 도민들에 대한 서명작업을 벌여나가면서 운동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래서 재야단체의 대표자들은 광양성당에 모여 도민대책위의 공동대표 및 집

19) 제주신문, 1988년 10월 25일자; 중앙일보, 1988년 10월 26일자; 한국일보, 1988년 10월 26일자

20) 제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관련동향」. 또한 제주도지사는 10월 17·18일 이틀 동안 청와대, 국방부, 공군본부를 방문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21)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21일자. 그의 이와 관련된 기사는 제주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의 각 1988년 10월 20일자 기사참조.

행위 선정, 도민대책위 명칭 및 결성일자, 장소, 재정보고 및 예산안, 활동계획 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이하 ‘도민대책위’)라는 운동조직을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도민대책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다.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제주북초등학교에서 도민대책위가 주최하고 대정 지역 주민 600여명, 도민, 대학생, 재야단체 등 2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결성대회 및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도민대책위는 공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한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의도는 미국의 극동전략에 따라 제주 전역을 ‘전략기지화하려는 음모’로서, “우리는 제주도민의 생존권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기 때문에 군사기지 설치계획을 반대하고, 핵전쟁의 위협으로 번질 한국 내 군사기지 확대를 결사반대”함과 아울러 “제주도를 한반도의 평화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보배로운 이 땅을 전쟁과 분단고착의 불모로 삼으려는 미국과 현 군부독재 정권의 가증스런 음모를 분쇄하고 자랑스런 제주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50만 도민과 함께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투쟁에 총매진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농악대와 자신들의 요구를 쓴 깃발을 앞세워 담은 깃발을 들고 행사장인 제주북초등학교를 출발하여 중앙로를 거쳐 광양초등학교까지 평화대행진을 하며 자신들의 뜻을 전 도민에게 알려나갔다.

또한 대학생들은 제주대학교의 지역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내에서 벌이던 교육과 홍보활동과 학교 밖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던 수준을 넘어 ‘대책위원회’가 몇몇 단대 차원의 운동조직을 10월말에 결성한다.²²⁾ 하지만 조직에 비해 그 역량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당시 학생운동은 광주학살·5공 비리 척결과 관련한 전국적인 쟁점을 가지고 노태우 정부를 압박해나가고 있었다. 때문에 대학생들은 두 가지 사안을 대해 통일된 조직으로서 하나의 대책위를 결성하여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11월 3일 학생의 날에 “광주학살·5공 비리 주범처단 및 송악산 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제주대학교 투쟁연합회”를 발족하여 군사기지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서울에서도 군사기지 반대운동과 관련된 제주 소식, 군사기지의 실체 등을 담은 「송악산」(제1호)을 제작하여 제주출신 학생들을 중심으로 소속 대학교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나눠주거나 대자보를 붙이는 활동 등을 전개해나간다.

22) 여기서 말하는 학생들의 대책위는 10월 30일에 있었던 도민대책위의 결성대회 및 규탄대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참가한 단체로서,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송대위, 이공대학 송대위, 인문대학 학생회, 법정대학 학생회, 해양과학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를 가리킨다.

제주지역과 서울에서의 군사기지 반대운동은 국회차원에서조차 점차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신민주공화당은 제주도에 직접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입장을 듣고, 공군본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군사기지의 추진배경과 대책 등을 따져 묻는다.²³⁾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혹은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군기지 이전설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는 신민주공화당 현지조사단에게 군사시설이 예정된 곳이 “제주도의 일부분이니 관광사업이나 제반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도지사는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재야단체가 중심이 도민대책위는 제주시에서 가진 1차 결의대회를 가진 후에도 실질적으로 운동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제주도 시내 중심가를 비롯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지지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서명작업과 전단배부 등과 같은 홍보활동에 치중할 뿐이었다.

다른 한편 도민대책위는 운동이 각 대책위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의 생존권 투쟁에 머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건설반대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들의 정체성을 담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것은 각 참여단체들이 독자적 혹은 연대하여 개최하는 평화대회로서,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개최한다. 도민대책위는 대회 마지막 날인 11월 23일 각 참여단체들이 함께 한 ‘군사기지철폐를 위한 범도민결의대회 및 폐막식’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한라평화선언’을 발표한다.

제주시에서 고조된 군사기지 건설반대 열기는 대정 지역으로 이어져, 모슬포 이웃마을 안덕면에서도 11월 29일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안덕면 대책위원회”(이하 안덕대책위)가 만들어졌다. 그 동안 안덕 지역주민들은 모슬포 군사기지 건설과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 하듯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대정대책위와 도민대책위의 운동 과정에서 조금씩 알려진, 군사기지가 건설되면 “땅값이 내리고 관광개발은 정체”된다는 인식을 받아들이면서 늦게나마 운동조직을 갖출 수 있었다.

23) 조사내용은 ① 관광개발 계획의 취소과정과 취소당시 주민들의 의견 반영여부, ② 87년 12월 현 대통령인 노태우후보가 이 지역주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의 空約化 과정, ③ 지난 62년부터 해외교포들에게 적극 투자를 권장해놓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배경, ④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될 경우 개발계획의 환원 문제 ⑤ 공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수용지구는 물론이고 가상 인접피해지구의 실태조사 등이다 (제주신문, 1988년 11월 3일자).

3) 연합운동의 모색과 자원약화

군사기지 건설반대운동이 확산되어 가자 공군은 군사기지 건설계획을 축소한다는 조정안을 언론에 비쳤다. 공군은 한편으로 기존 군사시설 보호지역 60만평 중 17만평을 주민들에게 불하함은 물론, 새롭게 지정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50만평을 해제하여, 이미 취소된 송악산 지구 관광개발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한편 한반도 남쪽의 운송루트 및 제공권 확보를 위해서 군비행장건설을 1992년부터 시작하여 1996년도에 완공하여 곧바로 작전기지로 활용할 계획을 신민주공화당 조사단에 밝힌다(제주신문, 1988년 12월 7일자).

공군의 조정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각 대책위와 여기에 참여한 재야단체들은 공군이 군사기지를 축소하여 건설한다는 조정안을 주민들의 저항을 일시적으로 얼버무리려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조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 나아가 각 대책위는 '다목적기지 계획하며 축소조정은 속임수다', '소규모 불하 거부한다. 선거공약 완전 이행하라', '투기꾼에 속지 말고 우리 땅을 지켜내자'는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진다.

한편 대정대책위를 비롯한 각 대책위는 공군의 조정안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대열기를 계속하여 조직화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기적으로 한 여름에 시작된 운동이 겨울로 접어들어 대정대책위와 도민대책위의 실질적인 지지세력이던 대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게 됨과 아울러, 한 해가 바뀔에 따라 앞으로 운동방향에 대해 새롭게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상황에서 도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운동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한 운동조직의 재조직화가 부각된다. 대정대책위, 안덕대책위, 서울대책위, 도민대책위, 대학대책위의 실무자들은 활동평가, 전반적 계획, 1989년 1·2월 활동방향, 협의체 구성문제 등을 논의하려 하였으나(1988. 12. 29), 실제로 각 대책위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그쳤다. 이어서 1989년 1월 5일에 다시 모였고, 이 자리에서 각 대책위의 실무진 대표들은 겨울방학 동안 임시 실무자 대표선정, 대표자 모임여부, 문화패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각 대책위의 실무자회의에서 도민대책위가 중심이 되어 군사기지 문제가 지닌 성격과 운동상황의 변화에 따라 운동방향을 통일시킬 수 있는 운동조직, 즉 각 대책위가 참여하는 하나의 운동조직으로서 범공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현되지 못한다. 다만 주민과 도민들은 물론 다른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기자회견과 같은 방식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하되, 최종적인 것은 대정대책위의 총회(1989. 1. 17)를 지켜보고 정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고,

이에 따라 1월 18일에는 대책위의 공동으로 성명서가 발표되고²⁴⁾, 이어 2월 22일에는 대표자회의가 열리는 등 침체되어 가던 운동열기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행해진다.

그러나 현실은 도민대책위가 제안한 통일된 하나의 운동조직을 결성하지 못한채, 운동역량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왜냐하면 한편 공군의 축소조정안이 정부의 정책변화로 알려지고(제주신문, 1989. 3. 4), 노태우 대통령의 제주방문 때 이것이 다시 확인되었고, 다른 한편 도민대책위의 중심세력이었던 제주시의 재야단체들이 당시 탑동 불법매립 반대운동으로 역량을 결집하는 방식으로 운동의 양상이 변했기 때문이다.²⁵⁾ 따라서 군사기지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대책위, 특히 대정대책위와 도민대책위는 더 이상 운동을 계속해 갈 동력을 상실한 채 걸어로 운동조직만 남아있는 형편이었다. 그 후 별다른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던 각 대책위들 중 대정대책위만이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결사반대 투쟁 끝났는가?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 결사반대 대정읍 공동대책위원회를 일단락 정리하며」를 통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공식적으로 해체한다.

4. 운동의 성격

1) 운동의 이념

군사기지 반대운동은 제주 사회운동사에서 보기 드물게 성공한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정부가 애초에 의도했던 군비행장을 건설하지 않은 것을 운동의 성과로 판단하여 내리는 평가이다. 하지만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곧 운동과정에서 각 대책위간의 입장차이가 드러나고, 공식적인 대응을 달리 보이지 않던 정부의 입장이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 알려지면서 운동이 급격히 소멸하였다. 물론 사회운동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의식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운동목표의 달성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운동의 학습경험이다. 왜냐하면 운동의 주도세력은 운동을 기획하고 운동의 지지세력을 운동에 참여시키고, 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재사회화된다. 따라서 운동이념에 대한 검토는 운동을 올바르게 평가하는데 불가결한 작업이다.

24) 대정대책위 위, 「1989년 기사년을 군사기지 결사반대 투쟁 승리의 해로」, 1989. 1. 17.

25) 이의 자세한 것은 조성운(1998)을 참조할 것.

운동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단적인 징표는 운동목표이다. 하지만 운동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운동의 참여자, 특히 주체세력은 대외적으로 자신들 행동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명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의 주체세력이 운동목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고, 이를 운동이념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때 그 운동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운동조직은 조직내외 구성원들에게 운동이념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조직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정 주민들이 원한 것은 다름 아닌 생존권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향상이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토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때마침 노태우 후보가 알드르 일대 국방부 소유의 임대경작지를 주민들에게 싼 값에 나눠주겠다고 대선 공약은 주민들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였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자신들의 소득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 주민들은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있었다. 다행히도 주민들은 일제 때부터 자신들의 생계터전을 읍아왔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축소와 토지양도, 그리고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자신들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대정대책위의 요구사항과 결의사항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그 밑바탕에는 자신들이 고향으로부터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겹쳐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그러나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유인물에는 고향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관광개발이 백지화된 데 대한 분노가 전면에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지역주민 주체되는 송악산 개발 이룩하자”는 구호 정도로 그치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군사기지 설치 반대 운동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된 슬로건은 “우리는 죽어도 대정을 떠날 수 없다”, “노태우 대통령은 선거공약 이행하라”, “우리의 땅 국유지를 완전무상 불하하라” 등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군비행장 건설이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미군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는 것임을 밝히며, “우리들은 전쟁 없는 실항민이 될 수 없다”, “지역생존 말살하는

26)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군사기지화’하려 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못살포라는 비아냥거림과 그 혼한 밀감조차 잘되지 않는 보름코지 척박한 땅으로 인하여 얼마나 슬한 치욕에 떨어야 했는가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땅을 저주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그런 땅이기에 더욱 많은 애정이 가고, 이 땅을 지켜야 하기에 TV와 신문, 향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부모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한길에 설까 합니다”(대정학우회, 1988.9.10)

다목적기지 완전 철회하라”등의 주장도 내세웠다. 그런데 이는 공식적 마을 대표자인 리장과 지역주민들 정서이라기 보다 청년 중심의 실무진의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정대책위의 사무국을 꾸려가던 실무진들은 대체로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대정사회연구회의 구성단계에서 주도한 사무국장은 실제로 재야단체인 한국기독교제주농어촌개발원의 간사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사무차장은 이후 대정농민회를 결성하는데 직접 참여하였던 인물이었다. 이들은 현지주민들의 마음에 와닿았을 수 있는 요구들로 주민들의 참여를 설득하고 동참시키면서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도 하였다.

주민들과 달리 재야단체·대학생·재경인들의 운동 이념은 민족의 생존권과 평화도시 건설에 주안점을 두었다. 물론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한 주장들을 펴지만, 이것은 이들의 운동의 이념이기 보다 운동의 정당성과 운동의 지지세력을 확대하려는 하나의 명분으로 삼은 측면이 강하다.

이들은 당시 송악산 지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당시 미군의 필리핀기지 사용에 관한 사용기한이 1991년으로 끝남에 따라 미국은 태평양 지역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안게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상원으로부터 필리핀과 필리핀 내 미군기지 협정을 갱신하지 못하면 필리핀 미군기지를 한국이나 일본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그래서 미국은 ‘다양한 세계각지’에서의 전력구축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대체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달리 주한·주일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주장하였다(홍현기, 1988:56).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① 비교적 남지나해에 작전 중 이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② 매력을 끌 수 있는 항구(넓은 항구 지역과 방파제, 수심이 깊고 정박이 수월하고 수리시설 등이 잘 갖추어지고 등) ③ 안정된 정부가 미국과의 방위협조에 원할하며 反美적이 아닐 것 등 ④ 다수의 숙련된 저렴한 임금의 노동자가 많이 있을 것(최종기, 1984:99-100)을 충족시키는 필리핀의 대체기지로서 한국을 주목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미군병력을 분산 수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 지역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도를 택하였다.

또한 1980년대 말 제주도 내의 재야 사회운동 단체들과 대학생집단 내부에서는 통일운동과 계급해방운동을 최우선의 운동목표로 설정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지역 주민들의 저항운동에 주목하면서 제주지역 문제의 해결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 역시 공존하였다. 이와 반면 재경인들을 중

심이 된 서울에서는 제주의 군사기지 건설문제를 통일운동의 하나로써 전국화할 수 있는 운동목표를 설정하려 했다. 이들에게 있어 제주의 문제를 갖고 전국적인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념은 군사기지보다 '반핵'으로 생각하여 운동 목표를 송악산 '핵' 군사기지 건설반대로 설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재야단체, 대학생 단체 대부분이 주민들의 송악산 군사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공감을 표시하고, 참여했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은 서로 달랐다. 때문에 실제로 활동 과정에서 발표되었던 선언문과 각종 슬로건들에는 주민들의 삶의 현실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국가의 계획이 대미 종속적 한국 사회의 모순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갔다. 이들이 내세운 운동이념은 반핵, 반외세로 표현되는 민족 자주권 확립으로서 당시 학생운동권과 재야단체들이 사회운동의 이념으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이를테면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2) 운동의 조직과 자원동원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불씨를 지피면서 가장 먼저 운동조직을 만들고 자원동원을 시작한 집단은 대정 지역의 청년들이었다. 당시 지역청년 몇몇은 고향인 대정 지역에 관심을 새롭게 갖기 시작하여, 대정사회연구회라는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다.²⁷⁾ 이들은 군비행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확인하여 자신들 또래의 친분이 있는 연령층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결사 반대대책위 준비위원회를 결성한다.

준비위원들은 리장이나 마을유지가 아닌 지역 청년들이었고,²⁸⁾ 준비위원들은 피해 예상 지역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바탕으로 준비위는 마을단위로 운동을 조직하려 했고, 산이수동 마을에서는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준비위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해 마을 차원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다른 마을에서는 쉽지 않았고, 단지 개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주민들의 관심은 결의대회를 통해 마을, 곧 집단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상모리와 하모리의 6개 마을과 모슬포 카툰

27) 이와는 별도로 대정지역의 청년들은 70년대의 송악극회를 계승한 대정예술동우회(1982년~1989년)와 클래식음악모임 울림(1986년~1991년)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자생적인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28)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문제제기한 세력도 청년들이었고, 또한 이들은 당시 기성세대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의 조직이 꾸러지고, 이를 바탕으로 대정읍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운동 조직으로서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결사반대 대정읍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었다.

먼저 대정대책위의 조직적 기반은 마을단위로 구성된 조직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자신들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주민운동의 조직적 기반은 그 지역의 사회구조와 피해유형에 따라 지역이 우선일 수도 있고 개인이 우선일 수도 있다. 이 사례지역은 마을 내에 준행정조직인 리 조직이 공식조직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성원들 서로 잘 아는 공동체적 성격이 남아있는 농촌지역이다. 또한 피해유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면 자신들의 토지가 국가에 의해 강제 수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대정대책위는 마을 내에 존재하는 리조직을 그대로 운동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동체적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 구성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조직적 기반과 관련한 또한 주목되는 것은 ‘읍’ 단위의 조직명칭으로서 ‘모슬포군비행장설치결사반대 “대정읍”공동대책위원회’을 내세운 점이다. 이것은 주민운동조직에서 나타나는 운동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근지역까지 포괄하는 지리적 포괄성과 해당 지역주민들을 운동주체로 참여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인근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주민들을 동참시키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그것은 대정대책위가 운동이 소멸할 때까지 처음에 참여하였던 마을 이외에 다른 마을 단위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된 것에서 뒷받침된다.

다음으로 대정대책위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 공동대표, 자문위원, 대책위원, 사무국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공식적인 운동조직을 갖추었다. 문제는 실제 운동조직을 추동할 수 있는 조직의 인적 충원과 재정 조달이었다.

이들 조직의 인적 충원은 준비단계에서 배제됐던 리장이나 마을유지들이 공동대표나 자문·실행위원으로 참여시킴과 함께 사무국을 준비위에 참여했던 청년, 특히 대정사회연구회에 참여했던 이들로 구성하였다. 이 점은 전개과정과 관련되는데, 우선 마을청년들은 평소 행정당국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던 이장들을 운동을 조직화하기 전에 이들의 참여를 의식적으로 배제시켰다. 하지만 결의대회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인한 마을 청년들은 공식적인 운동조직을 결성하는데, 마을에서 리장이나 마을유지들이 지닌 사회적 지위가 운동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리장과 마을유지들은 안보와 관련된 국가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를

주저하면서도 마을공동체의 공식적 대표로서 마을 주민들의 분노와 군비행장의 건설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경제적 불이익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에 위원장은 마을의 공식적인 조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인 반대의지를 지닌 마을유지 가운데 선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대정책위의 공식적인 조직체계는 리장과 마을유지들의 참여로 대표성을 지닐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이들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보다 이름만 올려놓은 형식상의 참여가 두드러졌고, 운동의 중반 이후는 그 정도는 심했다.

조직의 재정운영은 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자원이다. 재정운영은 재정 조달과 비용 지출로 나누어진다. 사례지역의 재정 조달은 크게 조직 내에서 충당하는 형식과 성금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비중은 후원회비 혹은 찬조금 형식의 성금이 월등히 많았다. 조직내에서 충당은 조직적 기반인 상모리와 하모리 6개 마을과 대책위원들의 회비납부가 원칙이었지만 마을 단위의 회비가 견혔을 뿐이다. 그 외 필요한 비용은 차입금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조달하고 후원금이나 찬조금이 들어오면 이를 갚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런 불안정한 재정은 소식지, 전단, 현수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경비와 제주시와 서울 지역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하는 교통비 등으로 지출되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었고, 그 나머지는 운동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던 실무진들의 경제적 희생 속에서 메워졌다.

이처럼 운동대상과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구성된 조직체계는 주민운동의 참여계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주민운동은 지역을 근거로 생겨난 문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체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주민운동에 참여하는 계층 혹은 집단은 구별된다. 사례 주민운동에서는 군사기지에 따른 피해정도에 따라 참여 계층 혹은 집단은 달랐다. 사례지역이 제주도의 서남지역에 위치한 중소도시이었지만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였다. 그래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계층은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임대경작자²⁹⁾와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편입될 농민, 군비행장 건설로 생계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해녀와 어민, 그리고 고향을 지키려는 지역출신의 대학생³⁰⁾이었다. 이에 반해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군비행장이 들어서면 수입이 예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앞

29) 이들은 일제에 의해 건설된 알드르비행장 일대 부지를 비롯해 해방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48여만평 중 37여만평을 매년 임대각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370여명에 이른다.

30) 제주대학교의 대정학우회 소속 학생들과 다른 지역, 특히 서울지역으로 진학한 대학생들 일컫는다

섰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운동에 직접 참여하기 보다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다.

이외에도 집회참석과 같이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재정적 지원과 지지표명을 보내준 대정읍사무소, 대정농업협동조합, 대정지서 등과 같은 공식적인 행정기관과 친목회, 지역출신 모임, 교사, 상인, 익명가 등 비공식적인 모임이나 개인들을 주목할 수 있다. 이들은 군사기지 반대운동이 지닌 운동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상당부분 공유한 집단으로서, 또 다른 사회적 지지기반이었다.

그렇다면 대정대책위는 주민들을 어떻게 운동에 참여시키고, 또한 지지를 이끌어냈는가? 대정대책위가 활용한 자원동원의 핵심은 준행정조직이자 마을공동체 조직인 리조직을 통해서였다. 대책위는 조직의 사무실을 하모 2·3 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리사무소에 두고, 자원동원의 매개체로 마을과 단체의 대책위의 조직을 활용하여, 전단 및 대자보, 소식지, 현수막, 풍물패, 방송, 비디오 등의 매체를 이용하였다. 이들은 마을과 단체가 중심이 되어 조직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풍물패를 내세워 집회를 가졌으며, 주민들에게 알릴 소식을 주요 거리에 대자보를 부착하거나 기존 리듬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가사를 붙인 노래를 부르며, 마을회관과 차량 방송을 통해 개별적·마을별로 알려나갔다. 이외에도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거나 군비행장의 피해상황을 담은 비디오 상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홍보방식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운동이 전개되면서 대책위내의 인적구성 간 결합도가 약화되면서 조직적 기반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운동의 사회적 기반도 잃어갔다. 대정대책위는 애초 마을과 단체의 대책위원들이 중심이 된 협의체적 성격을 지닌 운동조직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 보다 대정대책위는 사무국의 청년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으로 비쳐졌다.³¹⁾ 또한 정부는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항의 시위나 대책위의 항의방문 등에 대해 전혀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주로 언론을 통해 밝힐 뿐이었다.

또한 군비행장 건설계획의 취소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정대책위는 자원동원, 곧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운동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 결국 조직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화된 대정대책위는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공식적인 성명서를 통해 해체되었다.³²⁾

31) 구체적으로는, 계속 유보되는 대표자회의와 사무국회의, 각 마을 대책위와 사무국의 연계가 미흡했던 점, 사무국을 일반주민들과 다르게 보는 시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대정대책위, 「결산총회자료」, 1989. 1. 17).

32) 한편 모슬포 인접지역이면서 군비행장 건설에 따른 피해가 달리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강건너 불구경 하듯 가만히 앉아” 있던 안덕면 지역에서도 11월 29일에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안덕면 대책위원회가 결성된다. 하지만 이 주민조직은 대정 지역처럼 마을 조직을 모태로 하지 않고 단지 몇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 다른 대책위

대정 지역 밖에서는 대학생, 재야단체, 재경도민 등이 주도한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대학대책위는 마을 청년들에 의해 지펴진 운동의 불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리려고 노력했던 집단이었고, 그 중에서도 제주대학교 조사위원회이었다.³³⁾ 당시 움트기 시작한 제주대학교 지역조사위원회는 대정학우회와 함께 1988년 9월 제주대학교 대책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를 계기로 과·학년별 운동조직을 결성하려고 시도하나 여의치 않자 준비위 내에 교육전담반을 두어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의 전략적 배경과 피해상황 등을 교육해나간다. 이어 10월 중순에 경상대와 이공대 단대 차원의 운동이 결성될 뿐 대학 전체의 운동조직을 결성하지 못하고,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도민대책위 준비위원회의 가맹단체로 참여한다. 그 후 도민대책위가 발족할 때 탈퇴하고, 대신에 1988년 11월 3일 “광주학살·5공 비리 주범처단 및 송악산 군사기지철폐를 위한 제주대학교 투쟁연합”으로 제주대학교 대책위가 발족한다. 물론 이 운동조직이 송악산 문제와 관련한 독자적인 대책위가 아니었지만, 계속하여 대정대책위와 도민대책위의 집회에 참여하는 등 연대조직의 역할을 다한다.

그러나 대학대책위는 애초에 학생회가 아닌, 과·학년 차원으로 조직화(조직기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와 같은 학생자치기구와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조직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지지기반이 약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대책위는 집회, 서명작업, 거리시위, 송악산 등반대회 등을 전개하나 가라앉은 운동의 열기를 되살리는데 역부족이었고, 1989년 3월에 운동조직이 정리된다. 이후 지역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군가기지 반대운동이 소멸하는 단계, 특히 정부의 수정계획이 발표된 후에도 군가기지 반대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활동하지만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대학대책위는 운동에서 필요한 자원동원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역할을 맡았고, 그 후 운동을 통해 신설된 지역조역조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학생자치 기구로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³⁴⁾

대정대책위가 대정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군사기지 반대운동을 꾀던 운동조직이면, 도민대책위는 제주시 지역에서 재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된 운동조직이었다. 도민대책위는 지역청년,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기 시작한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³⁵⁾에

의 운동이 소강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결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운동을 전개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소멸했다.

33) 이외에도 제주교대 대책위, 제주전문대와 제주간호전문대의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형태였다.

34) 이후 제주대학교의 지역조사위원회는 지역문제에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35) 국본제주본부는 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생겨난 제주사회의 유일한 사회운동 단체로

의해 조직화된 운동조직으로서, 당시 제주사회에서 활동하던 재야·사회단체의 대부분이 참여하였다³⁶⁾. 이는 운동조직의 대표성과 조직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 실제 도민대책위의 조직은 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각 참여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대표를 정점으로 각 단체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와 조직의 실무를 담당한 사무국, 그리고 운동조직의 공식적인 대외역할을 담당한 대변인을 두는 조직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도민대책위는 운동이 진행되면서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 첫 번째는 자원동원의 문제였다. 실제 참여한 단체는 많았으나 그에 상응하는 자원동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수의 회원과 제한된 자원을 지닌 재야단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적이었던 반면,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그 외 사회단체는 대체로 운동목표에 공감한 대표만 참여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단체의 풍부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것은 연합체적 성격을 지닌 운동조직인 도민대책위와 참여단체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³⁷⁾ 효과적인 자원동원은 대표자 회의와 사무국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각 단체 내부의 토론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인데, 도민대책위는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두 번째는 도민대책위가 준비한, 각 대책위를 통일시키는 하나의 운동조직을 끝내 구성하지 못한 점이다. 대책위는 운동초기에 공식적인 조직을 준비하는 단계에 참여하였던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와 대정향우회, 그리고 안덕민주청년회를 공식적인 조직적 기반으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한국사회, 특히 제주사회에서 학생운동은 그 어떠한 사회운동단체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지닌 집단이라는 위상과 비중을 고려한다면, 운동조직의 다원성 확보라는 긍정적 영향보다 운동역량의 분산이라는 한계로 작용하였다.

세 번째, 대정대책위와 관계설정 문제였다. 도민대책위는 먼저 결성된 대정대책위와

서, 6월 항쟁이 마무리되면서 제주 지역의 사회운동단체를 태동시키는 산파역할을 담당하면서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36) 여기에는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를 비롯하여, 제주교사협의회·제주여민회·제주문화운동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제주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제주연합회·제주지역교회사회선교협의회·제주교회여성연합회·제주YWCA·서귀YMCA·국제서귀와이즈맨클럽·천주교제주교구대학생연합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제주지부·제주청년연합·보름고지미술동인·한라시민학교학우회·민주화를 위한 제주대학교교수협의회·제주지역노점상연합회·제주지역주민주체개발결정권쟁취공동대책위원회 총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37) 이와 같은 문제는 이 운동사례에 이어 발생했던 운동조직인 탐동 불법개발 이익환수 투쟁 도민대책위원회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조성윤, 1998: 172).

통합을 염두에 두고 운동조직의 명칭을 '도민대책위'로 결정하였다. 대정대책위는 자신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운동주체는 자신들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도민대책위'에 거부감을 보였다. 그래서 대정 주민들은 도민대책위를 재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혹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제주시의 운동조직쯤으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대책위는 계속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지지기반으로 대정지역 주민을 포함한 제주도 전체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참여단체의 회원들이었다. 도민대책위는 군사기지라는 문제가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특정 지역에 한정된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며 도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지만, 제주시 지역 그것도 시내 중심에서 홍보활동만으로 침묵하는 다수를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대책위는 통일된 운동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대책위 간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연대활동을 편다는 원칙을 확인하지만, 도민대책위의 입장에서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에 그칠 뿐 실질적인 연대활동에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예를 들면 대정 지역에서 집회가 있을 때 도민대책위는 소수의 대표자만이 참여하였던 데 반해, 제주시 지역에서 도민대책위가 주최한 집회에는 대정 지역의 주민 600여명이 참석할 정도였다. 결국 도민대책위는 자신들의 조직적 역량과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운동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였다.

한편 서울대책위는 서울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의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운동조직이었다.³⁸⁾ 당시 서울에는 제주사회를 연구하는 단체로서 제주사회문제협의회가 활동하던 시절이었다. 재경인들이 중심이 된 운동조직의 결성은 제사협 회원들과 방학에 고향에 왔던 학생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제주의 군사기지 반대운동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소규모의 운동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운동조직과 운동역량을 크게 기대하기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학우회 소속의 학생들을 통해 각 대학에 대자보를 붙이는 것과 같은 홍보활동과 더불어 제사협회원들을 통해 다른 재야단체³⁹⁾와 연대활동을 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서울대책위의 소속 대학생들을 통해 제주 지역의 대책위와 연대하였

38) 이 부분은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당시 관계했던 이들의 면접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기초한다. 이것마저도 10여년 전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곽만 세워보는 것에 그치는 한계를 지닌다.

39) 이들 단체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 공해추방운동연합, 평화연구소, 진보정치연합이었다.

고, 다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과 연대하기 위한 활동을 제사협 회원이 맡아서 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으나, 운동조직의 조직적 기반이 허약한 한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였다.

5. 맺음말

송악산 군사 기지 건설 반대 운동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대정 대책위와 재야 운동 단체가 주도한 도민대책위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조직, 재경 조직이 가세한 대표적인 지역 주민 운동이었다. 물론 여러 대책위원회가 동시에 움직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운동조직의 융집성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회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결국 1990년 3월 정부가 종래의 입장에서 물러나 송악산 군비행장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방부가 송악산 군사기지 중 47만평을 주민에게 불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각 대책위가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대정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역의 관광개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회적 장애로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운동은 6월 항쟁은 물론 이 운동 직전에 발생한 제주도 탐동공유수면 매립 반대운동의 부분적 성공에 의해 자극 받으며 일어났고, 동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이 국가의 군사기지 건설 정책을 백지화시키며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는 점 때문에 그 뒤 일어나는 지역 주민 운동을 더욱 고무시키는 촉진제로 작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또한 군사기지 반대운동은 현지 주민들이 중심이 된 운동조직과 재야단체, 대학생, 재경인들이 중심이 된 운동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대정 주민들의 조직은 마을과 피해지역이라는 공간적 기반을 두고, 조직적 기반을 지역적(읍단위)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조직의 명칭을 '대정읍'에 중점을 두었고, 운동의 이념에 주민의 생존과 같은 물질적인 차원을 강조하면서도 평화와 자주와 같은 보편적 이념을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는 태도를 지녔다. 반면 대정 지역 밖의 조직은 군사기지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가치적 기반에 바탕을 두고, 지지 기반과 연대를 염두에 두는 방향에서 조직의 명칭을 군사기지 혹은 '해'군사기지로 정하였다. 또한 운동의 이념을 주민의 생

존권에 근거하면서도 생존권이 너무 강조되는 경향을 반성하며 보다 일반적인 반핵, 반외세, 평화, 자주 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주민 중심의 대책위와 재야·사회단체 중심의 대책위는 운동 이념의 다양성과 조직화의 다원성, 그리고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통일된 운동목표를 위해 정부, 특히 국방부를 상대로 투쟁했던 지역 주민 운동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군사기지 반대운동은 각 대책위의 운동 이념과 조직화의 문제로 인해 대책위간 지속적인 연대 혹은 자율성을 확보한 통일된 운동조직을 결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대정 주민들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조직과 보다 보편적인 목표로 뭉친 재야 운동조직의 유기적 결합과 조직내의 응집성을 이루지 못한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운동의 발단이 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자체를 끝내 성취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주 군사기지 반대운동은 일정부분 성공한, 아직 끝나지 않은 사회운동이다.

참 고 문 헌

<1차 자료>

- * 제주대학교대정학우회, 제주대학교총학생회,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1988. 8. 26), <제주도송악산국가군사주요시설계획에대한공개질의서>
- * 제주대학교 대정학우회(1988. 9. 10),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는 글>
- * 제주지역 대학생 모임인 사계학우회 드림(1988. 9. 18), <사랑하는 길 삼촌님께>
- * 제주대학교대정학우회, 제주대학교총학생회,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1988. 9. 19), <성명서>
- *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제주여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서귀와이엠씨에이청년연명,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제주연합회(1988. 9. 26), <송악산공군기지설치 결사반대투쟁에 들어가며>
- *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제주교육대학총학생회, 제주전문대학 총학생회(1988. 9. 26), <성명서>
- * 모슬포군비행장설치 결사반대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1988.9.20), <우리는 결코 대정을 떠날 수 없다! -노태우대통령은 대정읍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 * 모슬포군비행장설치 결사반대 대책위 준비위원회(1988.9.26), <성명서 - 모슬포 군비행장설치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실시하며->
- * 모슬포군비행장결사반대투쟁위원회(1988. 9. 26), <결의문>
- *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제주교육대학총학생회, 제주전문대학 총학생회(1988. 9. 26), <성명서>
- *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제주대학교 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통일염원 44년 10월 5일),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 * 제주도 모슬포군사기지설치결사반대서울지역공동대책위원회(1988. 10. 14), <제주도 모슬포 군사기지설치 결사반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과 결의대회 결의문>
- * 제주도 모슬포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서울 지역 공동 대책위원회(1988. 10. 14), <제주도 모슬포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공개질의서>
- * 송악산 공군기지 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1988. 10. 15), <노태우 대통령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성명서>
- * 모슬포군비행장설치결사반대대정읍공동대책위원회(1988. 10. 16), <성명서>

- * 대정읍리장단협의회(1988. 10. 16), <결의문>
- * 송악산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제주대학교 대책위원회(1988. 10. 20), <서명용지공개사과문>
- * 송악산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도민대책위원회(1988. 10. 30), <성명서 / 결의문>
-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송·대·위, 이공대학 송·대·위, 인문대학 학생회, 법정대학 학생회, 해양과학대학학생회, 제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제주대학 총여학생회(통일염원 44년 10월 30일), <성명서>
- * 제주대학교 투쟁연합위원회(11월 12), <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 처단 및 송악산 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제주대학교 투쟁 연합회 투쟁 선언문>
- * 제주도 모슬포 군사기지설치 결사반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 결사반대 대정읍 공동대책위원회(1988. 11. 20), <반통일적, 반평화적 제주도 송악산 핵군사기지 설치계획을 결사 저지하자!!>
- *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 결사반대 대정읍 공동대책위원회(1988. 11. 20), <호소문>
- * 송악산군사기지설치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통일염원 44년 11월 21일), <반전·반핵 결의문>
- * 송악산군사기지설치결사반대도민대책위원회(분단조국통일기원 44년 11월 23일), <군사기지철폐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문 - 반군사기지 운동의 기치를 높이들자>
- * 송악산군사기지설치결사반대도민대책위원회(분단조국통일기원 44년 11월 23일), <한라평화선언 >
- * 제주교대 송악산 군기지 설치 결사 반대 대책위원회(통일염원 44년 11월 30일), <결의문>
- * 모슬포군비행장 설치결사반대 대정읍공동대책위원회(일자미상), <속보 - 도지사 이군보의 망발을 규탄한다!!!>
- * 모슬포군비행장 설치 결사 반대 대정읍 공동대책위원회(1988. 12), <속보 - 축소조정은 속임수다!!!>
- * 송악산군사기지설치결사반대 안덕면 대책위원회(1988. 12. 5), <산방산>제1호
- *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처단 및 송악산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제대 투쟁연합(통일염원 44년 12월 10일), <노태우는 선거공약 전면 이행하라!>
- * 제주도교회사회선교협의회 세계인권선언일 기도회 참가자 일동 (1988. 12. 10), <결의문 - 송악산군사기지설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 *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분단조국 통일염원 44. 12. 11), <공군본부의 송악산 군사기지 축소조정안 발표에 붙여- 정부는 도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군사기지 건설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 * 송악산군사기지설치결사반대 안덕면 대책위원회(1988. 12. 11), <결의문>
- * 제주대학교 투쟁연합산하 송악산 군사기지 철회를 위한 제주대학교 대책위원회(통일염원 44년 12월 15일), <전쟁위협 고조시키는 군사기지 웬말이나 한민족 씨말리는 미핵기지 철회하라!!>
- * 모슬포군비행장 설치 결사 반대 대정읍 공동대책위원회(1988. 12. 18), <촉구문 - 송악산 다목적군사기지 설치 완전철회 및 선거공약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 송악산군사기지 결사반대제주청년불자 준비위원회(분단조국 44년 12월 18일), <성명서 / 전두환·이순자를 국민의 심판대로!!!>
- * 모슬포군비행장 설치 결사 반대 대정읍 공동대책위원회·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 반대 안덕면 대책위원회·제주대학교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 반대 대책위원회·제주교육대학교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 반대 대책위원회·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 반대 도민 대책위원회·제주도모슬포 핵군사기지 설치 결사 반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1989. 1. 18), <단결·투쟁·승리를 위한 공동성명서>
- * 제주대학교 송악산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대책위원회(1989년 2월 22일), <송악산 군사기지 결사반대 소식지> 2호
- * 제주대학교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대책위, 교육대학 송악산 군사기지 결사반대 대책위, 제주전문대학 총학생회,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총학생회(통일염원 45년 2월 25일), <송악산 군사기지 완전철회하고 노태우는 선거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 * 제주대학교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대책위, 교육대학 송악산 군사기지 결사반대 대책위, 제주전문대학 총학생회,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총학생회(분단조국 45년 2월 27일), <송악산군사기지 완전철회와 노태우 선거공약불이행규탄대회>
- * 제대 송악산 군사기지 결사반대 대책위원회(통일염원 45년 3월 8일), <50만 도민의 단결투쟁 !! 드디어 군사기지 전면 백지화!!! 송악산 군사기지 철회투쟁 승리!!>
- *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지역조사위원회(1989. 3. 24), <주민에게 드리는 글>
- * 제주대학교 지역조사 위원회(1989. 4. 8), <주민에게 드리는 글>
- * 송악산 군사기지 완전철회를 위한 제주대학교 대책위원회·송악산 군사기지 완전철회

회를 위한 제주교육대학 대책위원회·제주도모슬포해군사기지설치 결사반대 서울 지역공동대책위원회 학생부·재경학우회협의체(일자미상), <송악산 군사기지 완전 철회를 위한 청년학생 투쟁결의문>

- * 대정공맹위 위원장 우영진, 사무국장 양영운(1989년 8월 14일),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 결사반대 투쟁끝났는가? - 모슬포 군비행장설치 결사반대 대정읍 공동대책위원회를 일단락 정리하며>
- * 펠리핀 미군기지 제주도로 이전- 제주도 전역군사기지화...주민 결사반대 - 민중의 소리(1988. 10. 20), <집중취재>
- * 국방부(1988. 5. 6),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군사 24464-939)>
- * _____ (1988), <국회자료>
- * 남제주군(1988. 11),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에 관한 사항>
- * _____ (1988. 10. 13), <건설 24464-10186 >
- * 제주도(1988),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관련동향」
- * 제주신문, 1987. 11. 26일자; 제주신문, 1988년 8월 12일자; 1988년 10월 20일자; 1988년 10월 25일자; 1988년 11월 3일자 11월 26일자; 1989년 12월 7일자; 1989년 3월 4일자
- * 중앙일보, 1988년 10월 20일자; 1988년 10월 26일자
- * 한국일보, 1988년 10월 26일자
- *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21일자

<2차 자료>

- 동아일보사(1990), 「동아시아의 새질서를 찾아서」
- 부만근(1995),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과정 연구』, 온누리
- _____ (1997), 『제주지역주민운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 이삼성(1993),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한길사
- 이상철(1995),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 _____ (1998),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태도의 변화”,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한울
- 제주도(1985),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
- _____ (1987), 『제주도종합개발계획요약』
- 조성윤(1995), “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 _____ (1998) “개발과 지역주민운동”,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한울
- 조성윤·문형만(1998),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운동”, 『제주도연구』15집, 제주학회
- 홍현기(1988), 『전환기의 한반도』, 태백